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
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9월 6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

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42 호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제3호 중 “**전가**”를 “**전가(轉嫁)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**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**”을 “**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**”으로, “**산하기관에**”를 “**단체에 공무원**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**”을 “**제4호 각 목의**”로, “**산하기관**”을 “**단체**”로 한다.

가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

다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35조제1항 전단 중 “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32조”를 “제32조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9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</u></p> <p><u>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제증명 발급 업무 등 단순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1.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<u>2.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<u>3.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·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</u></p> <p><u>4.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·단체가 직무관</u></p> | <p><u><삭 제></u></p> |

련자인 경우

5.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
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
무관련자에게 고문·자문 등
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·고
문·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
법인·단체에 소속되어 있는
경우

6.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
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
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·
지분,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
있는 법인·단체(이하 “특수
관계사업자”라 한다)가 직무
관련자인 경우. 다만, 주식·
지분,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
명義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
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, 공무
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
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
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.

가.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
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
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
의 30 이상인 사업자

나.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

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
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
의 30 이상인 사업자

다.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

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
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
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

7.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
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
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
련자인 경우

8.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
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
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
경우

9. 지연 · 혈연 · 학연 · 종교 · 직
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
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
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
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
10. 최근 2년 이내에 인 · 허가,
계약의 체결, 정책 · 사업의 결
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
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
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
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

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
관련자인 경우

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
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
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
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
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
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
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을
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한
경우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
는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
수 있다.

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
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
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
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,
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에
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
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
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
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
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

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
2.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3. 직무 재배정
4. 전보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·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

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
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
우

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
문에 따른 신고, 제2항 및 제4항
에 따른 신청, 제5항에 따른 조
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
· 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
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
야 한다.

제6조(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
무활동 내역 제출) ① 부산광역
시 북구의회 사무국장(이하 “사
무국장”이라 한다)은 그 직위에
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
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
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
활동 내역(임용 또는 임기 개시
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)을
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
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
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직하였던 법인·단체와 그
업무 내용

<삭 제>

2. 관리·운영하였던 사업 또는
영리행위의 내용

3.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
정하는 사항

제7조((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

지)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
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
아니 된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
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
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
1.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
무 또는 조언·자문을 제공하
고 대가를 받는 행위

2.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
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
나 소속된 기관에 직접적인
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
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
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·
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
행위

3. 외국의 정부·기관·법인·
단체를 대리하는 행위. 다만,
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
다.

<삭 제>

4.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
취임하는 행위. 다만, 의장이
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5.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
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
직무 관련 행위

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
한다.

제8조((가족 채용 제한) ① 사무국
장은 의회, 부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또는 구의 산하
기관(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
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
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자
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
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
서는 아니 된다.

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(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
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

<삭 제>

한다)은 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산하기관을 지휘·감독·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(수의계약 체결 제한) ① 의회사무국장은 의회,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과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수의계약(이하 “수의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,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의회,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, 자신의 가족이 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산하기관을 지휘·감독·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

<삭 제>

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기관과
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
며,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
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
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(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

<삭 제>

고)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
소속 기관의 퇴직자(의회 소속
공무원이었던 자로 퇴직한 날부
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
해당한다)와 다음 각 호의 행위
에 해당되는 사적 접촉을 하는
경우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
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사회
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
를 함께 하는 행위
2.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
을 함께 하는 행위
3.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
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
4.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
을 부담하는(퇴직자가 재직하
고 있는 법인·단체, 후원자
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

포함한다) 식사·음주 등의
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
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
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
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
직자와 사적 접촉을 마친 날부
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
다.

제19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
의 금지) 공무원은 공용 차량·
선박·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
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
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
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
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아니
된다.

제21조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
당 행위의 금지) 공무원은 자신
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
·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
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
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·2. (생략)

3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

<삭 제>

제21조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
당 행위의 금지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이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

4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·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전가(轉嫁)-----

--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단체에 공무원

--

가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
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

다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

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,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

제26조(직무관련자 거래 신고) ①
공무원은 자신,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(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(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. 다만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

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

5. -----
 -----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-----

<삭 제>

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2. 부동산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. 다만, 공매·경매·입찰 및 공개추첨(이하 “공매등”이라 한다)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(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), 용역,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. 다만,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.

② 공무원은 자신,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

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직무
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
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
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
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
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
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
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
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
다.

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
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
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
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
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
다. 다만, 공무원 자신의 거래
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
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
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
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
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
신고하여야 한다.

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

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,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
제35조(기록 보관·관리)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32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,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를 따른다.

② (생략)

제35조(기록 보관·관리) ① ---
----- 제32조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